

녹색산업 기술개발 지원 시급

정부의 관련정책 정리가 우선 ... 세부내용·지원정책 구체화도

국내 녹색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1월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녹색성장 간담회에서 그린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관련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세부내용과 지원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 정책이 정리되지 않아 관련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정부가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대자동차 이기상 상무는 “친환경자동차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부품의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라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장선 지경위원장은 “정부가 녹색성장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차액만 얻으려는 기류가 팽배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진출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지식경제부 김영학 차관은 “정부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명확한 정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또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준현 원장은 “국제 수준의 그린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석사·박사 전문 인력 1만5000명을 육성하는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녹색산업 세제지원, 그린에너지 투자펀드 조성, 녹색기술 인증제도 등 지원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6>